

“AIDS 수혈감염 대책없어”

“129응급 의료체계 실효성있나” 구리제건강 9/1. 2. 27

국회보사위 보건사회분야 정책질의

국회보사위는 16일과 18일 이틀간 보건사회분야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에이즈 관리 ▲응급의료체계 ▲보건소장충원 ▲약가편법인상등에 대해 질의했다.

◇에이즈관리

박영숙(신민) 송두호(민자) 의원등은 최근 에이즈감염우려 집단이 익명으로 헌혈을 해 이로 인한 수혈시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일반환자를 보호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에이즈감

염우려집단이 헌혈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며, 현재로선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방지대책이 없으며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태라고 밝혔다. 또 감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이즈환자치료를 위한 특수병동은 현재 계획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129응급의료센터

박영숙·송두호의원은 129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보사부는 응급의료체계가 준

비없이 시작돼 문제가 있으며, 제도시행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인상, 지정병원선정의 문제등도 시인했다. 또 이의 보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소장 충원

정기영(신민)의원은 많은 수의 보건소에 의사보건소장이 충원되지 못하는 이유와 보건소법시행령을 둘러싼 보사부와 내무부의 이견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보사부는 보건소장이 결원되면 의사를 임명토록 하고 있으나 보·어촌지역에 의사보건소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앞으로 의사 보건소장확보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 보사부는 보건소의 조직구성과 정원기준을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나 내무부에서는 조직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반대하고 있고 정원기준만 보사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품납품부조리와 약가편법인상

이돈만(신민)의원은 병원의 의약품납품부조리, 유사명칭 사용제품의 편법가격인상 문제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보사부는 약품납품과 관련한 부조리문제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개선대책을 수립, 병원 예산회계 준칙시행과 보험약가관리강화, 병원협회와 제약업체등 관련단체의 자율정화 활동결과로 크게 감소했으나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으므로 꾸준히 개선대책을 마련

‘정신보건정책 기획위’ 구성 요구

비의료기관 줄이고 치료시설 특성화 포함

연대보건대학원 보사부에 건의

연세대 보건대학원(원장·김일순)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치료와 재활을 위해 정부차원의 정신보건정책기획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국가적인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19일 보사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지난달 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정신보건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채택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맡고 있는 비의료시설은 점차 줄이고 기능별로 차등을 뒤 병

원화 또는 전문요양시설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전문의료기관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 도시와 농촌등 지역사회에 알맞는 정신보건센터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를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전국적 역학조사 및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전문인력 수급계획과 치료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의료법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시설을 급성, 만성, 장기격리, 재활치료등으로 특성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정신질환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과 정신보건의날 등을 제정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갈 것을 건의했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사제품을 엄격히 규제하거나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증빙자료를 제출토록하는등 조치를 강구, 편법적인 가격의 인상소지를 없애도록하겠다고 밝혔다.